자재 가격 '재앙'- 특단의 지역 중소 건설업 대책 火急하다

- 자금압박 · 공사차질 · 유동성위기의 '3重苦', 4개월동안 200% 오른품목도 -

지난2001년부터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는건설자재가격의상승세가금년들어더욱가파른폭등수준으로치닫고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자금 압박과 공사차질, 그로인한유동성위기등의3중고에시달리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특히 중소 규모지역 건설업체들은 고사지경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건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가격 재앙

최근 건설노조의 파업 등으로 대부분 공사현장이손을놓고있는가운데건자재값폭등으로겪는소규모지역건설업계의어려움은이미한계수준에도달해있다. 무엇보다도철근, 강관파일등의각종건설용철강제품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가격 앙등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 상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에게는쓰나미보다도무섭고더욱 강력한 수준의 재앙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말이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즈음에 톤당 40만원 하던철근이지금은100만원을훌쩍넘긴것은 물론, 현금을 미리 주어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재 가격 대란이 자금난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고강도철근의경우, 10mm 기준톤당공장도가격이지난해 3월의 46만 300원에서 올 2월에는 60만원대, 3월에는 74만원대로 오르는가 싶더니 현재는120만원대에서거래되고 있다. 불과 4개월동안에200% 이상상승한것이다. 주요 건자재 중 하나인 레미콘의 공급가(광주 · 전남 기준)도 1㎥ 당 5만 4,000원까지 오름으로써지난2년동안약 35%의상승률을보이고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들어 유류비마저 폭등세로 인상되면서 공사 현장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운송료 인상을요구하는건설중기노조의파업등으로공사에큰차질을빚고있는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 및 건설기계들 중 원유와관련되지않은자재는거의없다. 당장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등에사용되는경유가격급등의타격또한심대하다. 건설중장비의사용비중이높은현장의경우, 공사가진행될수록단가가오르면서적자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것이다.

'웃돈에 현금 박치기…'

건설공사자재비중의최상위를차지하고있는 레미콘과 철근 가격 폭등에 더하여 수급불안에물류마저원활하지못해지면서중소건설업체들의끝없는시름만깊어가고있다.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사원가부담이감당할수없을정도로커지고있기때문이다.

대단지 아파트 건설 공사를 비롯한 대형 현장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의 중소 업체가 시공하는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는 특히 철강 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이렇다보니철근등의일부자재업자들은가격이 더욱오르기만을기다리며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아예 공급을 기피하기도한다. 이럴경우현장작업은중단될수밖에없다.

공사 일정에 맞추어 관급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려면관급단가와시세의차액을웃돈으로, 그것도 '현금박치기'로 지불해야 한다. 웃지도울지도못할촌극이연출되고있는것이다. 민간발주공사의경우도예외가 아닌바, 공사를 수주한 당시의 계약 금액과

현재의 공사 단가에 엄청난 간극이 발생함으로써곳곳에서마찰을빚고있다.

조달청 단가, 시장 가격과의 괴리 커

그만큼물가상승에따른계약금액변경이용이하지못하다는것이다. 관급공사의철근은 잔여분 전체에 대하여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철근단일품목에대한단가상승인정폭이미미하다. 즉, 시장에서유통되는실제단가와의차이가너무커그상쇄효과를기대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실례를들어보자. 관급공사사급자재단일품목의가격이15% 이상상승할경우, 단품 슬라이딩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품슬라이딩제도에서는 시장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조달청 고시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손실보전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문제점이있다.

‘ 마른 수건을 또 짜내는 현장

최근의건설현장이3중고에허덕이는가운데 하도급업체는더욱위축되고 있다. 원도급업체의 적자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로 전가될수밖에없는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사현장이멈추거나아파트건설공사의 경우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는부도위기에내몰릴수밖에없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의위기감이원도급업체보다훨씬 크다. 이와함께소규모건설업체들이난립하면서 덤핑 수주도 불사하는 등의 출혈경쟁도최근의난국에한몫을하고있다. 이로 인해공사금액이떨어지면서특히작은규모의상가나공장을 짓는소형업체의 경영 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봄에 공사물량을많이확보한업체들도인상되는자재가격을감당하지못하는등경영난에허덕이고있다.

대형건설현장과는달리중소규모의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한계에 수준에 이르렀다. 현장나름대로의원가 절감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다. 현장관리 직원들의 1인 2역 또는 3역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이다. 기왕에투입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노무비라도줄여보고자‘ 마른수건을또 짜내는심정 에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익은커녕 적자 폭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거듭하고있는것이다.

시장 가격 기준의 물가 상승 반영을

건설 자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자재파동이 닥칠 때마다 건설업계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건설 ·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지역중소 업체의자금사정이 최악인상황에서올들어지속되고있는자재가격및수급대란의대책이절실하다. 유류비마저걷잡을수없는상황에서미래의 경영계획은커녕 당장의 현실부터가 좌불안석이다. 그렇다면최근의자재가격파동에서중소 건설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없는가?

무엇보다도 단품슬라이딩제도의물가상승에따른조정단가를실제시장유통가격으로적용해야한다. 아울러각종건설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보전해주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건설자재의생산및유통과정을특별관리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특단의 지역 중소 건설업 대책 화급

더불어정부가잇달아내놓고있는‘ 건설부문지원방안 ’도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현실과는 엄청난괴리가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24일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형건설업체의입찰참가를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적용대상기관 ’을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까지로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종합건설업체(172개사, 전체종합건설업체의 1.34%)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정부투자기관이외의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그리고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공단(112개))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당해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1% 미만규모의토목 · 건축공사에대해서는입찰참가가제한된다.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 발주 74억원, 지자체 ·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에는 도급 하한 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 건설업계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3중고 또는 4중고로 고사지경에 허덕이고있는지방중소건설업계의실상을면밀히파악하여보다큰틀의거시적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대증요법적 땜질처방은 그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 빈익빈 부익부 ’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것이기때문이다. 덧붙여현재 대형건설업체위주로운용되고있는BTL 사업등의시행구조도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과감하게개선해야한다. 건설 금융 지원책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자유로운이용이가능해져야할것이다.

중소 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산업의뿌리이다. 특히, 지역경제를책임지고있는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위한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간이 흔들릴진대 지역경제의회생은물론 건설산업의미래또한암울해지기때문이다.

김영구
세진종합건설대표이사